

광주 찾은 대선 후보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이재명 “내년 지방선거서 개헌”
이준석 “긍정”·국힘 “적극 추진”
권영국 “헌법 새겨넣어야” 강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제21대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5·18은 역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지난 12·3 계엄에서 현재를 구하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낸 정신”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구여권도 5·18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았느냐”며 “5·18 문구를 반영하는 것이라도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여권이 워낙 말을 잘 바꾸니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실현 가능성이 작아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기념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꾸준히 긍정적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면 우리 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꼭 수록돼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민주화 과정을 열거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하다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며 “우리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도 별도로 발표한 ‘5·18 45주년 메시지’를 통해 “오월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진보의 역사를 일구어가는 고귀한 씨앗”이라며 “이 정신을 헌법에 새겨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5·18 헌법 수록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피땀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신 5·18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해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적 정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이제 우리는 5·18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5월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후보는 전남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 아래 어떤 부패도 독재도 있을 수 없다”며 “단순한 대통령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겨냥하는 발언을 해 5·18 정신에 대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전날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김 후보는 이날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용현 기자

우원식 “비상계엄 해제, 5월 광주의 승리”

전야제 국회의장 첫 초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의 승리는 5월 광주의 승리”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 무대에 올라 “5·18 광주를 알고 느꼈던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국회를 찾아와 계엄군을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 행사인 5·18 전야제에 국회의장이 공식 초청 받아 발언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가 내디딘 한 걸음을 수많은 길을 걸여온 역사”라며 “오월 광주가 있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80년 5월 광주의 햇불이 45년이 지나 다시 촛불로, 응원봉으로 다시 광장을 메웠다”며 “80년 고립무원의 상

황에서 계엄군에 맞선 광주 시민들이 증명한 양심과 용기의 힘이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고 민주주의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만들어냈다”며 “그러하여 절박하지만 밝고 당당했던 광장, 그것은 5월 광주의 유산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광주는 현재를 구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힘”이라며 “광주의 빛이 민주주의와 함께 영원히 빛나도록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근산 기자

정치권 “5월 광주정신 계승…민주주의 회복”

45주년 한목소리로 다짐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인 18일 정치권은 일제히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함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한 뿌리이자 지금도 힘차게 박동하는 민주주의의 심장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겨울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던 극우 내란 세력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은 한 5월 광주 정신은 또다시 꺾힐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시는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시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6·3 대선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들을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광주 영령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모두가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는 5·18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5월 정신을 계승해야 하는 막중한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며 “5·18 정신 아래 어떤 부패나 독재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식 독재로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5·18은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소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적극 추진해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적 정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민주주의를 향한 가치발길을 걸여온 김문수 후보의 뜨거운 진정성이 화해와 통합을 염원하

는 국민 여러분들 마음에 닿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광주 정신은 저항이자 나눔이고, 그 목소리가 12·3 계엄을 막아내는 국민의 원동력이 됐다”며 “그러나 내란 세력은 여전히 창궐하고 있다. 전두환과 윤석열, 전광훈의 아바타에 불과한 후보 김문수는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5·18을 모욕한 자들이 다시는 고개 들지 못하게 하겠다”며 “그 시작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이런 5월 광주의 영령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 “보수 진영 일각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저희는 꾸준히 저희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헌법’ 빠진 이주호 기념사 ‘공허한 메아리’

강기정 시장 “기대 빛나갔다”
김영록 지사 “관심없어 유감”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정부 기념사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역사 왜곡, 폄훼 방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형식적인 표현만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5·18 45주년 기념사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의 역사를 넘어 우리 모두의 역사다. 함께 오월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1980년 숭고한 용기와 희생으로 지켜낸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 위에서 대립과 분열을

넘어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5월 정신 계승, 갈등·분열 극복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지만 정작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역사 왜곡, 폄훼 방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아 형식적인 표현만 나열하는 데 그쳤다.

기념식을 지켜본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 대행의 기념사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행의 기념사에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도 재발 방지 약속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다짐도 없었다”며